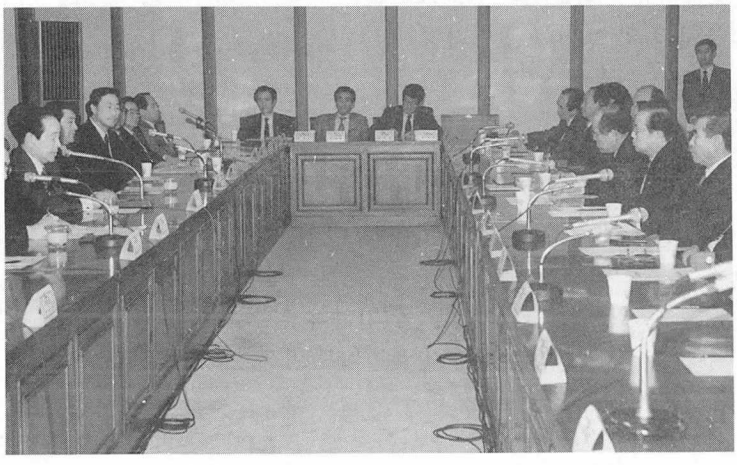
초 점

김영삼 총재, 부가세 영세율

—10월 14일 본회 전회장 등 농축

—홍 보 부—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인 본회 전동용 회장은 지난 10월14일 11시 축협중앙회 등 축산관련단체, 농민단체 회장단 및 임원들과 함께 여의도 민자당 중앙당사에서 민자당 김영삼 총재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축산생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관세에 대한 영세율 적용과 축산업 자조금제도 시행 등 축산농민들의 숙원들을 금년 대통령 선거공약에 포함시켜 적극 관철해 줄 것을 김총재에게 강력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총재는 축산 농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 대통령 선거 공약에 이 문제를 포함시킬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으며, 황인성 민자당 정책위의장도 이같은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책건의를 해 공약에 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본회 전동용 회장과 노영한 전무(축산관련단체협의회 간사)를 비롯, 축협중앙회 명의식 회장, 한국낙농육우협회 강성원 회장, 대한양계협회 신홍종 회장 등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원단체들과 기타 축산단체, 농민단체 장들이 참석했으며, 민자당측에서는 김영삼총재와 함께 황인성 정책위의장, 정시채 국회농림수산위원장, 권해옥 국회농림수산위원 등이 참석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전동용 회장은 이날 100만 축산농가들을 대변하여 김총재에게 『우리나라 축산업은 국민식생활의 변화로 그 비중이 계속 높아져 왔으며, 농촌의 여론을 이끄는 지도적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산생산자재에 대한 부가세와 관세의 부과, 자조금제도의 미정착 등으로 UR협상타결 이후 와해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전제하고, 『지난 12년간 전 축산인들이 줄기차게 요청해온 축산생산자재에 대한 부가세·관세 영세율 적용과 축산업 자조금제도 도입을 조기에 실현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전동용 회장은 특히 『농업과 어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세조치했으면서 사료·동물약품·축산기자재 등에 대해서는 면세조치를 유보하고 있는 것

적용 대선 공약채택 약속

산단체장들과 간담회서 밝혀 —

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에도 어긋난다』고 지적, 이의 해결을 요청했다.

또한 『자조금제도는 농가 스스로 모금하여 업계문제를 해결키 위해 집행하는 민주적 제도』라고 전제, 『UR협상이 타결되면 정부보조지원이 없어지므로 자조금제도의 조기정착 만이 축산업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밝히고 이의 시행도 아울러 요청했다.

김총재는 이에 대해 『축산분야는 잘만하면 국제경쟁력이 높은 분야이므로 적극 지원하겠으며, 이 자리에서 축산단체들의 한결같은 여망을 수용, 농촌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축산단체들의 요구를 대폭 수용할 것을 약속했다.

그는 또 『개방화시대에 우리 농축산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하는 등 『농축산업 발전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총재는 이밖에 『농어촌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의 간섭을 줄이되 지원정책은 더욱 늘려야 한다』면서 앞으로 생산자 단체들의 자율성을 늘려나가야 농촌이 발전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개방화 시대에 걸맞게 우리 농축산업을 경쟁력있는 농업으로 육성키 위해 이를 위한 42조원 투자계획의 차질없는 추진 ▲우리 농민이 씨뿌린 만큼 보람을 거두도록 하기 위한 농축산물 가격안정 등의 정책 방향을 견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황인성 정책위의장은 한국축산관련단체협의회의 건의에 대해 자신이 농림수산부장관 재직시에 해결할려고 했으나 타부처의 반대로 무산되었다고 상기하고, 이번 대통령선거 공약에 이를 포함시켜 축산인들의 바램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영삼 총재와의 정책간담회는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인 본회 전동용 회장이 주선해 마련됐으며, 이번 정책간담회를 계기로 축산인들의 숙원인 축산생산자재에 대한 부가세·관세 영세율 적용과 자조금제도 정착에 대해 큰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